

선거와 노동사회정책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정치의 계절인 선거시기가 돌아오면 온갖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안 정치, 사회, 경제이슈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슈들까지도 모두 제기되고 전국적인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오히려 선거시기만큼 온갖 이슈들이 제기되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없는 것을 보면, 선거시기는 정치가 활성화되고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힘이 세지며 정치인, 관료, 학자들조차도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는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의 정책 가운데서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짓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은 정곡을 찌른다.

특히 20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과 국경 없는 금융자본주의의 폐해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규제의 틀과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ILO 총회에서도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제시된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 유연성 강조, 비정규직 일자리 수용 등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년층의 고용의 질만 악화시켰다는 반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에 처한 영국, 스페인 등에 대해서도 긴축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

장도 나오고 있고(Paul Krugman), 더구나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및 그보다는 약하지만 경제위기에 놓인 영국 등에서도 현재와 같은 긴축 중심의 정책이 동시에 취해지는 한 유럽연합국가들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그리스 총선거나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긴축정책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규제금융과 긴축정책 지속을 주장한 쪽이 승리했고, 프랑스에서는 긴축정책의 전환을 주장한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부채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택하는 경우 실업률이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지고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진다는 데 기존 정책의 모순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뿐 대안적인 정책패러다임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또는 고삐 풀린 규제완화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규제방안도 아직 선진국들 사이에 수렴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정책에 대한 회의나 비판은 무성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총선거나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는 부채와 재정적자 등 경제위기의 극복, 경제위기로 촉발된 사회적 문제, 특히 실업문제 해결이 단골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각국의 선거와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프랑스, 대만, 스페인,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바로 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대만과 스페인은 벌써 한참 전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 먼저 대만 마잉주 국민당 정부는 연임에 성공했고, 스페인에서는 기존의 자파테로 사회당 정권이 경제위기 속에 자유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긴축정책을 추진해오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긴축정책의 전환을 촉구해 온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에게 패배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는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연합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경제정책에 주는 함의가 남다르다.

지난 5월 6일, 7년 임기로 올랑드가 선출된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결과 및 6월 17일 사회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하원의원 선거 결과는 노동과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긴축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재정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독일 메르켈과 프랑스 사르코지의 동맹이 깨졌을 뿐 아니라 프랑스는 오히려 21.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의 저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고용촉진 정책으로 U턴을 해서 기존의 정책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간접고용의 많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것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정책 변화는 긴축정책을 강요받아 온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연합의 쌍두마차였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정책갈등도 노골화될 것이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개발국가의 주도에 의한 산업화를 겪어 왔으나 성장우선 정책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래 진보를 내세운 민진당 정권 아래에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 중국의 부상, 대만경제의 정체 속에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동안 복지와 진보적 사회정책을 주도해 온 민진당과 성장우선 정책을 내세워 온 국민당 사이에 갭이 컸다. 그러나 2012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당과 야당인 민진당 사이에 복지와 사회정책에 관한 한 일정한 수렴현상이 있었다. 특히 마잉주 후보를 내세운 국민당은 고령화와 확대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민진당이 내걸어 온 사회복지와 공정한 분배정책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수용하여 “공정, 통합,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마잉주 총통이 선거공약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다면 대만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새롭게 강화되겠지만, 만약 이행하지 못한다면 국민당은 다음 선거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페인인 건설업, 여행업, 은행업 등 서비스업 등의 성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던 자파데로 사회당 정부 아래에서 2008년 말 경제위기를 맞았다. 사회당 정부는 경제위기 속 공공부채와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축정책을 채택했는데, 이 새로운 정책이 자파데로 정부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여 2011년 11월 총선거에서 정권이 사회당 정부에서 보수당인 인민당 정부로 넘어갔다. 새로 선출된 보수당 정부는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해고를 쉽게 하며 해고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노사정협의주의와 부문별 단체교섭제도를 바꾸는 등

의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교통과 같은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상과 민영화, 부자들이 아닌 고소득 중산층들의 세금인상, 공공부문의 임금삭감, 공공교육과 보건분야의 비용삭감 등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과 희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2012년 5~6월에 은행산업의 위기, 고용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사회당 정부 정책보다는 스페인의 부동산 투기, 여행업 등에 기반을 둔 투기적 성장모델, 저율의 풍부한 투자자금이 가져온 착시적 경제적 붐, 국제경제적 맥락의 급격한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IMF와 유럽연합의 추가 긴축조건이 붙지 않은 구제금융을 통해 심각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25%를 넘는 실업률과 엄청난 부채, 재정적자의 위기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위기에 대한 시장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위기의 심화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심화라는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새로 집권한 인민당의 정책방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혁이 고통을 노동자, 이민자, 청년들에게 전담케 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오는 저항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그 영향력이 크다. 미국 역시 실업,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 측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각종 공공투자나 지원정책을 통한 주택버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생지원,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위기의 극심한 악화를 일정한 정도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정부의 공공투자정책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반대, 의료보험의 의무가입과 적용률 확대 반대, 한시적으로 면제된 부자세금의 시한연장을 관철하면서 이제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의 일자리창출 성과가 보잘 것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과 티파티운동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파들의 움직임은 2008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지속과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과 사회정책에서도 여전히 시장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비등한 상황에서도 티파티운동에 힘입어 공화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공화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199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그러나

2008년 이후 일정하게 역전되었던, 노동과 사회분야에서 시장중심적 정책을 다시 펼칠지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공화당의 승리는 경제위기에 대해 영국, 독일과 같이 긴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보수적인 노동사회정책을 다시 한번 지배적인 흐름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바마의 재선은 프랑스의 올랑드 및 하원의원 선거결과와 연계되어 노동과 사회분야에서 공공예산을 이용하여 고용을 늘리고, 기본복지를 유지 혹은 개선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LI**